

東大新聞

1998년 (별기 2542년) 10월 27일 (화요일) 호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 -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백섭 /부주간 심구박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역 중구 필동 3가 26 (02)260-3491~2 FAX (02)279-1270 / 780-714 경복경주시 석각동 707 (0561)770-2057

일방적 총장 낙점에 학내반발 거세

총학, 본관 점거 농성돌입... 오늘(27일) 4주체 공동대응방안 모색

법인이사회에서 총장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간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학내 제주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22일 오복원 이사장을 비롯한 동국학원 이사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호텔 중극관에서 제1백 53회 이사회를 열어 송석구(철학) 현 총장의 재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인이사회는 학내 제주체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송총장의 재임을 결정함에 따라 그간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해 노력해오던 교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등은 각각 법인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법인과 학내 제주체들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26일 새벽 5시50분경 이사장실점거를 시도해 이날 오전 11시경 점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태를 예상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교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 끝

에 한 학생이 분당항방병원으로 후송돼 입원하는 등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상실을 접거하고 있는 총학생회는 "이 사장이나 총장 등 약속에 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면담에 응하기 전까지는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날부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들은 오는 11월 3일까지 동맹휴업 성사를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교수직선제를 통한 총장선출을 준비해오던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 22일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해 법인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날(23일) 예정대로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수회칙에 따라 교수직선설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2일부터 4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고 총장후보 선출 투표일을 11월 27일로 결정했다.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총장추대위원회(가칭)를 통한 총장선출안을 제시해오던 직원노동조합(위원장=백경선)은 23일 민주적 총장선출

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열어 법인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박정호·정치학박사과정2학기)는 2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과적상의 문제제기와 송석구 총장에 대한 전면불신임을 결정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열리는 대학원학생대표회의에서 대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세부사항을 의논한다.

경주캠총학생회(회장=백재욱·법4)은 오늘(27일)부터 학내선진전을 통해 지속적인 여론화작업을 전개하고 학내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을 지속적으로 요구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학내 제주체들의 공동적 요구사항



본관 이사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간 학생들을 교직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은 결국, 법인이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총장이 선출되는 것을 저지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총장선출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줄기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내제주체들은 오늘(27일) 문화관 그릴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대철 기자

재선임 의미와 학내 반응

‘학내 민주주의의 퇴보’... 연임결정 재고돼야

지난 22일 법인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송석구총장 재선임은 학내구성원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이 소식을 접한 구성원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해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황당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그간 오복원 이사장이 몇차례 공식석상에서 교수직선제에 의한 총장선출 불허 입장을 내비치려 우려했지만, '실마' 이런식으로 까지야 했던 것이 현실로 반영된 것이다.

현 송석구총장의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급작스럽게 법인이 송총장 재선임 결정을 한 이유는 총장선출로 인해 학교가 시끄러워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송총장이 추진하던 일을 마무리짓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교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제3캠퍼스·일산 불교

종합병원 건립을 송총장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의이다.

송석구총장 재선임 발표 후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 총학생회, 학부 총학생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성명서 및 입장 발표를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고 급기야 총학생회는 어제(26일) 법인이사장실을 점거, '절대로 굴복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4주체의 공통된 목소리는 '학내주체의 의견을 무시한 법인의 일방적인 날치기 총장 낙점은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로 모아진 상태이며, 오늘(27일) 4주체가 모여 각 주체의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학생회의 경우 차기 학생회 선거로 인해 역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고, 직원노조는 총장추대위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교수회는 그간 교수들만의 교수직

선제를 고집하고 있는데다 교수회에서 결정된 선거일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학내 4주체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렇다고 공동연대 투쟁이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이건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내주체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는 각 주체의 입장이 오고 갈 이변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을 두고 학내 주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처사가 비민주적이라는 데 있다.

지난 5월 학내주체들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의 총장후보 추대방식 등을 통해

총장을 선출한 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 세종대, 조선대 등 많은 대학들이 '보다 발전된 민주'를 위해 학내 각 주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총장추대위 등을 꾸려 교수직선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흐름에서 본교는 오히려 '민주의 퇴보'를 겪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구나 88년 학원자주화투쟁으로 얻은 총장직선제, 즉 힘있게 쌓아올린 민주의 탐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그 수위를 더하고 있다.

'민주의 퇴보'란 평가에 대해 법인의 한 관계자는 "동국학원의 정관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아무런 법적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민주'의 잣대는 '적법'이나 불법이나 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견이 보장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입을 감안할 때 법인의 이번 처사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음이 분명하다.

총장선출방식은 그 대학의 민주의 척도를 나타낸다.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점에서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환 기자

송재운 법인사무처장 인터뷰

“정관에 따른 합법적 결정이다”

법인이사회에서 송석구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재임결정한 이후 학내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재운 법인사무처장을 만나 송총장 선임 배경과 입장 등을 들어보았다.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에 대해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등 학내주체들이 법인의 날치기 낙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동국학원 정관 제43조 1항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날치기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송석구총장의 임기가 4개월가량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일찍 차기총장을 결정한 이유는.
=이름같이 없진 않지만, 총장선출에 대한 구성원들의 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사행정상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일찍 결정하는 것이다. 법인에서 차기 총장선출과정상의 여러 가지 방법상의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90, 95년 총장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교수들간의 파벌조성이나 구성원들간의 반목과 질시 등은 진정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평가속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선임에 대해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등 학내주체들이 법인의 날치기 낙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법인 동국학원 정관 제43조 1항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므로 날치기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의 법인이사장실 점거 등 구성원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법인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구성원들이 법인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안 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인이 총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 민주의 퇴보'라는 평가 있는데.
=총전에도 말했듯이 학교법인 정관에 의한 것이므로 민주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용환 기자

동국만평

김경일



아니 선거준비중에 왜 흥두개?

민주총장을 염원하는 동국대학교 교수회 성명서

100년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동국 대학교는 그 동안 민족사학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상 세계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우리 동국가족 모두는 이를 실천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 화합을 이룩하여야할 현실에서 지난 10월 22일 법인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현 총장을 재선임하는 일방적인 결정소식은 동국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유발하는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동국 21세기 비전"을 위해 대 화합을 요구하여 왔던 현 총장은 자기 스스로 그 허구성을 만천하에 노출시켰으며 또한 민주적 행정지도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두차례에 걸쳐 동국 각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교수회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현 총장은 이번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퇴를 표명 함으로써 교수회에 대한 자신의 모멸을 최소화할 필요가 할 것입니다. 이번 법인이사회의 결정은 동국구성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존의 총장후보 선출관행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여 학원을 사문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독단, 독주 그리고 독선의 체제로 퇴행하려는 저의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립대학법인의 전횡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막기 위해 금번 정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마당에 우리대학을 아직 4개월의 임기를 남긴 시점에서 차기총장선임을 극비리에 전격처리한 법인의 동기와 저의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인이사회의 결정은 교수회와 교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교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수회 규정에 의해 민주총장으로 선출된 현 총장은 법인의 일방적인 차기총장선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둘째, 법인은 차기총장 재선임결정을 즉각 철회하고교수회 결정에 의해 추천된 총장 후보를 수용하라!

셋째, 동창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이 사태에 앞장 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이러한 우리 교수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학내외의 불행한 사태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법인과 총장에게 있음을 재삼 주지하는 바입니다. 본 교수회는 민주적 방법을 의한 총장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마지막 순간 까지 극한 투쟁은 전개해 나갈 것을 모든 교수회 회원과 동국가족 여러분께 결연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동국대학교 교수회

법인이사회의 총장 연임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동국대학교 노동조합은 1998년 10월 22일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현 총장의 차기 총장 연임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확대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와 노조는 총장후보 선출제도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는 단체협약 제5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현재 학교측에 총장후보선출제도에 관한 건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11월 정기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법인이사회에서 비밀리에 차기 총장을 선출한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먼저 밝혀 둔다.

본교는 최근 10여년 동안에 두 차례의 총장선출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했다. 또한 상당수 대학이 이사회의 독선적 선출과 교수회 직선 등으로 심각한 학내 소요와 후유증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노동조합은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총장후보 선출제도를 통해서 후보들이 추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 최근에 몇몇 대학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출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공포화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지난 두 차례의 과도적인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임에 틀림없다. 비록 그것이 실정법상의 권한행사라고 주장하더라도 파사현정의 불법(佛法)따라야 할 중립대학의 이사회로서는 정법(正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신성한 일터인 동국대학교의 위상 실추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현 이사회 구성 이사들의 전 근대적인 의식과 자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학내 분규소요를 유발하는 해교행위로 간주하여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현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다. 대학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된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책임의 일단을 통감한다. 이제 대학 구성원 모두 총장 선출과 관련된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전근대적인 행태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동국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모든 현안에 우선하여, 이번 결정이 철회되고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로서 바람직한 총장선출제도가 확립될때까지 결연히 투쟁할 것일 선언한다.

동국대학교 노동조합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낙점에 대한 민족동국 30대 총학생회 성명서

기간 30대 총학생회는 대학구조조정과 5백억 비자금 문제, 그리고 불교종합병원과 제3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공개할 것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 였다. 과정에서 학교당국의 불성실한 대응에서 실망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학교의 어른으로서 학내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기간의 과정에서 30대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들 즉 교수회, 직원노조, 14대 대학원 총학생회, 30대 총학생회가 일관된 목소리로 학내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와 제주체의 참여를 주장해왔고 작은 성과지점으로 이달 30일에는 '동국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상징하고 학교당국과 학내 주체들간의 논의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다. 동국의 미래에 대한 제주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낙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1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었던 총장선거가 10월 22일에 열린 '법인이사회'에서 이사 13인, 감사 3인 총 16인 전원참석에 만장일치로 현 송석구 총장의 재임이 합의되면서 동국대 총장선거는 법인의 일방적이고 밀실적인 낙점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끝이 났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왜 우리를 빼고 했냐'는 식의 감정적인 문제의 것이 아니다. 그동안 총장선거를 바라보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입장을 내댘었다. 교수회는 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면서 교수님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있었고, 직원노조에서는 학내 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총장 추대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었고, 14대 대학원총학생회와 30대 총학생회에서는 동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는 법인의 일방적으로 총장을 낙점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인 송석구 총장에 대한 학내 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갈 것을 이야기 해왔었다.

이렇게 학내 구성원들이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서 동국발전의 큰 틀 속에서 총장선거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오후가 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낙점의 소식은 학내 구성원들의 분노를 사이에 충분히 처사라고 생각 한다.

민족동국 30대 총학생회는 1만 2천 학우들의 이름으로 감히 말한다.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대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저지른 법인 이사들의 공개사과와 날치기 법인낙점의 형태로 선출된 현 송석구 총장에 대한 불 인정과 학내 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재선출의 과정을 가져갈 것을 요구한다.

민족동국 30대 자주적 총학생회

소나기

법인의 일방적 총장 낙점

△나는 너희가 지난 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 학교 말하는 건가요?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짜증나는 학교! △아! 도간네!(경악된 사투리) △학교 운영을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 거야...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다. 당신은 안돼! △경악 또~아! 말도 안된다고요. △송총장님의 얼굴은 총장으로서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03=석구. 왕 어루림 △안돼요~ 안돼. 그녀는 못합니다. 누구 맘대로~ △웃기지 말라고 그러쇼~ 어용 이사진 즉각 퇴진!

교수회



유덕기 교수회장

그간 교수직 선제를 주장해 오던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는 지난 22일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연임 결정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교수회는 지금까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해 교수회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오홍석(지리교육학) 교수를 선출하는 등 선거를 위해 계속적인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법인 측에서 현

직원 노동조합



백경선 노조위원장

직원노조(위원장=백경선 이하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교수회 그리고 직원노조, 학내 4주체들이 참가하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대책위원회(가칭)'를 준비해 왔다. 노조는 지난 22일 법인이사회회의의 '현 송석구 총장 재임 의결' 소식을 접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제(26일)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분관절거능성과 관련하여 노조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으며, 오늘(27일) 열릴 4

대학원총학생회



백정진 대학원총학생회장

14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백정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는 지난 22일 법인의 송석구 총장 연임결정 소식을 듣자 다음 날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그동안 민주적 총장선출을 물론 학내 현안문제를 학내 주체들과 합의·토론을 통해 동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동국발전 대토론회'를 준비해 왔으나 법인의 송석구 총장 연임결정으로 인해 대토론회의 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

“비대위 구성해 현사태 해결에 힘쓸터”

총장 연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에 유덕기 교수회장을 만나 현 교수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인의 일방적인 현 총장 낙점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총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수회는 지금까지 학교에 화합적이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사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의 일방적인 연임 결정은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동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법인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 중임에도 법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학내 4주체 연대로 대응책 마련”

주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과 각 주체간의 연대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이에 백경선 노조위원장을 만나 법인이 사회 결정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인이사회 결정안에 대한 노조측의 입장은. =일단 법인이사회의 일방적인 총장재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제8대 직원노조의 입장이다. 이는 재임된 총장 1인에 대한 회의가 아닌 법인이사회회의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총장 낙점 형태에 대한 것이다. -법인이사회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내 모든 상황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내소요상황을 최소화하고 학내 3

으로 이해·융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은 이번 주에 열릴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우리는 법인의 처사에 결연한 의지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3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듯이 11월 초부터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 다음달 27일에는 총장후보 선거를 치를 것이다.

-학내 다른 주체들과의 연대는.

=교수회는 문이 열려 있다. 서로 긴밀히 연락하고, 정보를 전달해 민주적 방법 에 의한 총장 선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박영실 기자

서울캠 총학생회

“민주적 총장선출 이뤄내겠다”



이미성 부총학생회장

2학기 들어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줄곧 주장해왔던 서울캠 제30대 총학생회(회장=구준서·전자공4 이하 총학생회)는 법인의 발표이후 공식적인 전체 학생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비상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이미성·국교4 이하 총운위)를 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어제(26일)부터 분관 이사장실 접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비상 총운위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법인의 일방적 총장낙점불인정과 동맹휴업성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민족동국 총투표'와 '11월 3일 민족동국 동맹휴업', 그리고 26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총운위원 단식 등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방안 실행을 준비중이다. 이에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이번 법인의 처사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법인의 총장 재선임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면.

=법인의 이러한 날치기는 한마디로 황

경주캠 총학생회

“서울캠과 연계해 투쟁해 나갈터”



백재욱 총학생회장

학생회 선거와 총장 선거 준비로 인해 각 주체들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22일 법인이사회에서는 학내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송석구 총장의 재임을 결정해 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주체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백재욱(법4)총학생회를 만나 앞으로의 방향성과 총장선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금까지 총장선거를 위해 계획했던 것이 있다면.

=총장선거를 비롯해 학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사업의 대부분을 학부재문제에만 매달렸던 것 같다. 중운위내에서도 총장선거에 대해 논의했던 적은 없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번 문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 투쟁해나갈 것이다.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생각은.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 오는 30일 전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던 동국발전 대토론회를 준비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인지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이번 일은 지난 96년 12월에 있었던 노풍뎀·안기부법 날치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반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이때에 날치기를 하는 현 법인의 모습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총장선출과 관련해 준비해온 것은 무엇인지.

=총학생회는 '민주적 총장선출'이라는 대전제하에 일을 추진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제주체들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다. -현재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안은. =이후에도 '민주적 총장선출'이라는 대전제하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꼭 관철시킬 것이다. 현재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는 물러서진 않을 것이다. 총운위내에서 학생회선거를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접거농성또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계속하겠다. 또한 오늘(27일) 진행될 학내 4주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시급한 것은 총장과 법인의 퇴진”

으로 예상된다.

이에 박정진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만나 향후 대응방안을 들어보았다.

-23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학원의 입장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합의했다. 첫번째는 이번 법인이사회의 총장 낙점은 학교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송석구 총장의 전면 불신임을 결정했다.

-어제(26일) 학부 학생회칙에서 분관 이사장실을 점거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학부 학생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여긴다.

-이같은 물리적 충돌이 오기는 가운데 '동국발전 대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것의 방향은.

=오늘(27일), 교수회·직원노조·학부 학생회측과 만나 현 사태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다.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원칙은 고수하겠으나 원래 오는 30일에 열리기로 한 대토론회의 일정 및 법인의 송석구 총장 연임 결정의 부당성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의 내용이 될 것이다. -학내 주체들과 연대의 방향은. =각 주체들의 기본입장은 법인의 총장 낙점 반대, 송석구 총장 불신임으로 모두 비슷하다. 이에 4주체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성명을 도출하겠다. 한편 교수회 측에서 교수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법인과 총장의 퇴진이지, 총장 선출 방식에 문제를 두고자 하면 안된다. 김미경 기자

오녹원 이사장과 송석구 총장은 즉각 퇴진하라

법인이사회의 기반적 총장연임결정은 전 동학을 경악케 만들었다. 지난 22일 법인이사회에서 송석구 총장의 연임을 날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88년 학원자주화 투쟁 이후 성숙해온 학내 민주화의 염원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이성적인 법인이사회의 결정은 동국발전을 염원하는 우리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으며 다시 한번 법인의 학교발전의지를 의심케 만드는 일이었다.

법인이사회의 총장연임결정이 있기 전부터 학내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총장선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교수회에서는 그간 학내 민주화의 결실이었던 교수 직선방식의 총장선출을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총장선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직원노조와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 그리고 학부 총학생회도 각각 최대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우리의 대표자이자 최고 어른인 총장을 모시고자 했다. 대학의 총장은 학교의 대표자, 지도자로 전 구성원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아야 하는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송석구 총장은 학내의 어느 누구에게도 그 권한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교 100주년과 21세기를 맞이하는 이번 총장은 진정으로 학교발전의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총장이 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점된 현실은 동국을 다시 한번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법인의 일방적인 날치기 임명으로 선출된 총장은 학교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바이다. 또 이와 함께 송석구 총장과 오녹원 이사장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은 92년간 이어온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로인해 일어 나는 모든 학내 분쟁의 책임이 법인과 송총장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법인으로는 더 이상 동국발전을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학원 총학생회는 송석구 총장과 오녹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임원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오녹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임원과 송석구 총장의 퇴진만이 진정한 동국발전의 길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4대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우리는 용기있는 총장을 원한다

동국의 주인은 없다. 동국학원의 3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도 없다. 물론 법인이 동국발전을 원하지 않거나 동국학원의 생존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법인의 임명을 받은 총장이 실제로 3주체를 보호하고, 대변하고 책임질 수 있겠는가? 더욱이 대학의 구조조정, 교육개혁, 재정위기 등이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우리 힘으로 총장을 옹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총장은 법인에 대해 얼마나 힘을 가질 수 있고, 3주체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법인은 즉시 기속적이고 구성원들의 의견반영없는 일방적 총장선출을 철회하고, 대학행정의 최고 집행권자이자 책임자인 총장을 3주체의 힘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경주캠 총학생회는 경주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을 진정한 주체로 인정하고 학생참여를 보장해 주는 총장을 원한다.

21세기 동국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지도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이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는 용기있는 총장이야말로 동국이 원하는 총장이라 생각한다.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동국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총장을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리적 절차로 선출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교수, 직원, 학생참여로 민주총장선출하고 동국발전 앞당기자.

경주캠의 오랜 숙원 부총장 권한 강화하고 자치권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하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15대 총학생회

냉철한 이성과 머리로 이 난제를 풀어가야

금번 모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현 총장의 연임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인은 자연인 황명수로서, 나아가 15만을 대표하는 총동창회장으로서, 또한 모교법인 이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현 총장의 연임 결정에 일체의 하자도 없으며 본인의 소신에 찬 의사결정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그 근거와 당위성으로서는 첫째, 현 총장은 백성욱 총장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대학과 비교해 한발 앞서가는 21세기 비전을 제시한 인물이라 평가하고 둘째, 일산에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 경주캠퍼스를 분할하려는 도시계획 변경 등 학교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과제들을 같이 해결한 점 등 학교 명운을 물려주고 있는 3주체 즉, 법인, 학교, 총동창회가 어느때 보다도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를 기획단계부터 시행하여 중간단계를 거쳐 이제 최종 마무리를 분합하는 데 있어 현 총장에게 한 번더 인기를 맡겨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만 한다는 대명제와 원칙하에 천거하게 되었다. 또한 총장선거를 둘러싼 각종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교가 정보화시대의 선구자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총화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각 주체간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동국인이요, 우리 총동창회의 한 가족인바 15만 총동창회를 이끄는 책임자와 선배의 입장에서 이번의 난제를 냉철한 이성과 머리로써 서로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대화의 장을 가져, 과연 어떠한 것이 21세기 대학의 무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를 서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본인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인은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동국인을 사랑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처님에게 기원드리며, 본 입장표명에 대신하는 바이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황명수